

민주당, 광주 민심 묵살

최고위, 광주시장 경선 '시민배심원 50%' 적용 의결

“개혁 빙자 계파싸움 너무 심하다”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시장 후보 공천에 시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취지를 살려 달라는 광주 국회의원들의 건의를 끝내 외면했다.

민주당은 14일 “당 최고위원회가 지난 12일 밤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 점수를 50% 반영하고, 나머지 50%의 당원·시민참여 비율은 추후 공심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3·4·5면>

공심위 간사인 오영식 전 의원은 “그간 적지 않은 논란과 이견이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시민배심원제 경선을 하게 된 것은 정치개혁과 민주당의 변화·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민주당

당이 광주 민심을 사실상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끝까지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반대했던 박주선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은 당헌과 당규에 위배되고 원칙이 훼손된 것”이라며 “동원 경선이 우려된다며 공정성 확보가 의문시되는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한 것은 광주 시민의 역량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 전남지역 단체장 후보는 “개혁을 빙자한 당내 계파 싸움이 너무 심하다”며 “이러다 당이 쪼개지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밀어붙인 것은 “결국 광주시민은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 국회의원들이 국민참여경선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양보했음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적절한 합의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시민공천배심원제를 50%나 반영한 것은 사실상 광주 민심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광주시장 경선후보 측에서는 민주당 주류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나머지 50%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공심위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모 후보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특정 후보를 광주시장으로 만들려고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공심위를 열어 전남지사 후보 면접은 17일, 광주시장 후보 면접은 19일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공심위는 광주시장 후보 공천의 나머지 50%의 당원 및 시민참여 비율은 논의하지 않았다. 투표나 여론조사나 논란을 빚고 있는 전남지사 국민참여 경선 방식, 광주 복구·여수·순천 기초단체장 시민배심원제 적용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공심위는 16일 이들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심위는 6명의 광주시장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해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배심원도 200명에서 400~600명 선으로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 50% 부분에 시민 참여를 25% 정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알림

즐기세요, 현대미술의 세계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 연중 강좌 제2탄

이우용 광주비엔날레 부이사장 ‘예술의 인문학적 사고’

※ 선착순 100명·무료

19일(금) 오후 3시 광주 농성동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光州日報社

“광주·전남 모든 학원 밤 10시까지”

개인과외도 제한...전남 5월·광주 7월 시행 방침

광주·전남지역의 모든 학원 교습과 개인과외의 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의 학원 및 개인과외의 교습시간은 초·중·고교생은 밤 10시까지,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이며, 전남은 초·중·고교 모두 밤 12시까지다.

광주교육청은 14일 “교습시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규제위원회의를 거쳐 조만간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규제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최근 교육위에 상정했으며 개정이 마무리되면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수업 등 공공교육 내실화, 성장기 청소년 건강보호,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교습시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은 또 “자체 조사결과 광주·전남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55~65%가 교습시간 제한을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추진해 온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신학기 이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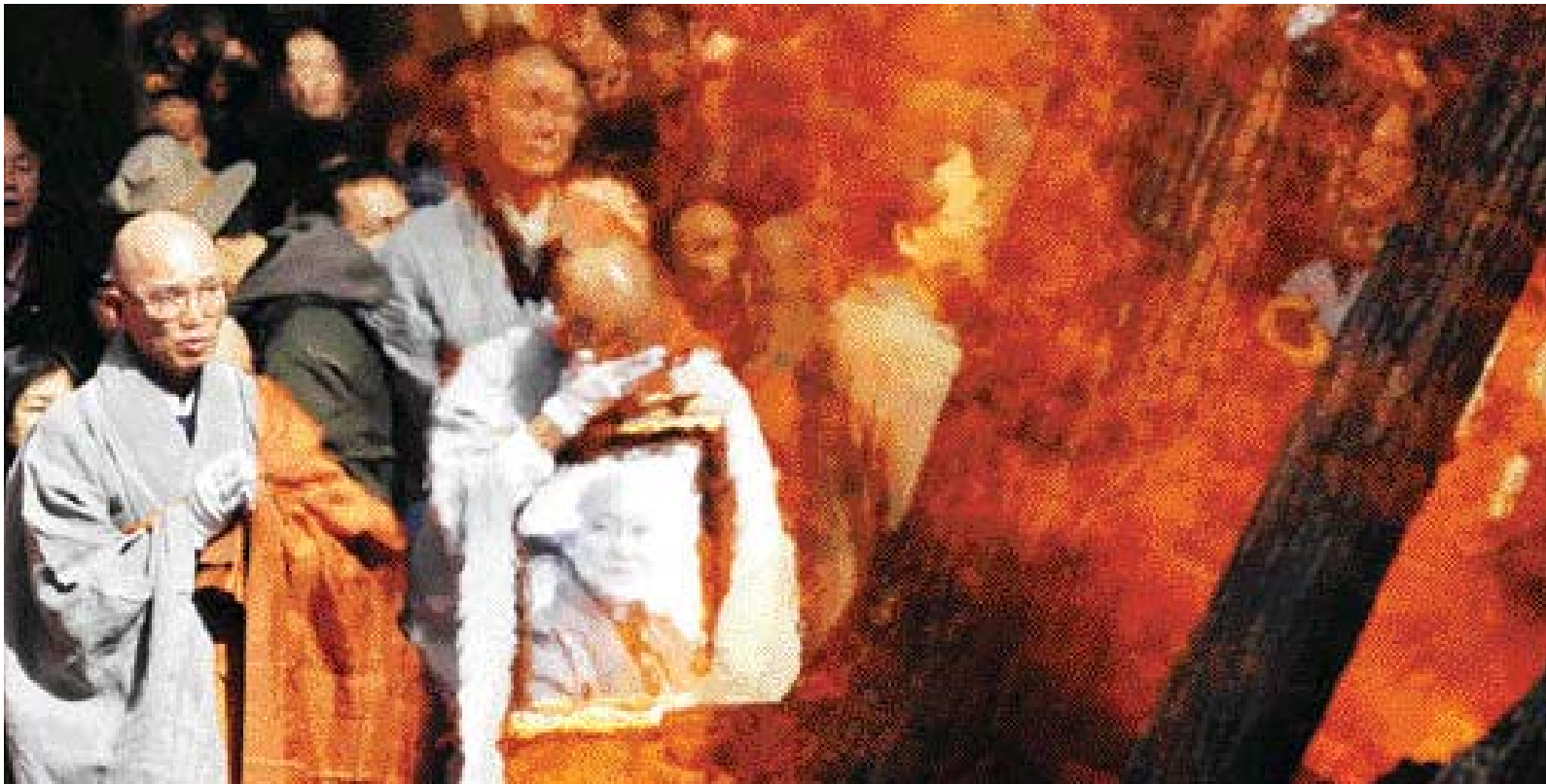
조례 개정 등을 마치고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일선 교육청의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늦춰졌다.

교습시간이 밤 10시로 돼 있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은 학원 운영자의 집단반발과 지방선거 등을 의식, 조례 개정이 부진한 상태다.

규제대상은 광주가 학원 3천764곳, 교습소 1천488곳, 개인 과외 교습자 1천944명 등 7천196곳이며 전남은 학원 2천962곳, 교습소 694곳, 개인과외 2천462명 등 6천118곳이다.

다만 속식을 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이른바 기숙학원의 등록은 다소 완화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불꽃 속의 눈물

법정스님이 불길 속에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고 먼 길을 떠났다. 지난 13일 순천 송광사 다비식에서 영정을 든 한 스님이 법구를 덮은 장작더미에 불길이 오르자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맑은 가르침 남기고 먼 길 떠나다

‘무소유’ 법정스님 다비식·습골의식 마무리 제자들 “유언에 맞지 않는다” 국민훈장 사양

지난 11일 입적한 법정스님이 13·14일 양일간 출가 본사인 순천 송광사에서 봉행된 다비식과 습골의식을 끝으로 금세의 인연을 마감했다. <관련 기사 7·12면>

“일체의 장례의식을 행하지 말라”는 스님의 유지에 따라 13일 최대한 간소한 예식으로 치러진 다비식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덕수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불교신자와 스님, 추모객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또 다비식 이후에도 추모객이 대거

몰려 이날 하루만 3만여 명이 송광사를 다녀갔다.

14일 오전에는 송광사 다비장에서 다비가 끝난 법정스님의 유골을 수습하는 습골의식이 상좌 등 10여명에 의해 경건하게 진행됐다.

이날 수습된 유골은 송광사 불일암과 서울 길상사에 나눠 안치한 뒤, 내달 28일 송광사에서 열리는 49세 이후 각각 불일암과 강원도의 한 토굴에 뿌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가 법정스님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하려 했지만 제자들이 “스님의 유언에 맞지 않는다”며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제자들은 다만 조계종이 내린 대중사법계 추서는 조계종 내부의 일인 만큼 받아들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김대영 bigkim@동부취재본부=김은중 기자ejkim@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를더로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순천대학교가 학학대학 유치 확정으로
신약개발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광양민권 중심대학
국립 순천대학교
광신대학교